

해운업체 긴급경영자금지원 대·중견기업에 93% 몰아줘

총 9772억 중 중기에 지원금액은 660만원... 해진공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그림의 떡' 군산 석도훼리 등 여객선사, 자금 못받아... 민주 이원택 의원 "신용보증범위 확대해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 이후(2020년 3월~8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체 긴급경영자금, 총 9,772억원 중 HMM(현대상선)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9,112억원을 지원했고, 중소기업에는 66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한 금액의 93%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됐고, 정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지원금액의 7%만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진공의 해운업체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S&LB(선박 매입하여 재임대), 선박 후순위담보, 회사채인수 등으로, 해운업체가 일정정도의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해진공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진공의 경영자금지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군산의 석도훼리 등 경영난이 심각한 여객선사는 S&LB, 선박 후순위담보, 회사채인수 등 해진공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영지원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진공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해양진흥공사"라며 "해진공이 이제 대기업 지원중심에서 중소기업 지원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진공이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계약, 임차보증, 계약이행보증을 포함한 신용보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해양진흥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호남·제주권 교육청 국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 교육감

지난해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 세금 잘못 거둬 징계받아

지난 10년간 잘못 거둔 세금만 5조7330억원 징계받은 직원은 2010년 이후로 총 3만4722명 민주 김수홍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지난해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걷어 받은 징계 건수가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만 5조 7,33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부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국세청의 세금오류 건수는 2,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30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잘못 걷어 내린 징계는 2,94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국세청 전체 직원이 2만 1,081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2만4,503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5조7,3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

다. 이 중 과소부과한 세금은 총 5조 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과다부과한 세금은 총 6,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의 2010년 이후로 총 3만 4,722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3만 4,511명으로 99.4%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오류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세법적용 착오로 귀속시기 등을 잘못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홍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 7천억원이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운덕 의원 "경기도 기본주택정책 보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전주시 갑)은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역률을 500% 향상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용자율을 1% 대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운덕 의원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고, 기본주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품질 검사 등의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운덕 의원은 "제대로 공공임대 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3년간 공공임대 아파트의 하자 건수를 살펴보면, 장기임대 4,462건, 공공임대 10,297건, 분양주택 9,358건으로 총 24,117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내 465만 무주택 가구를 위해 분주히 노력해 부동산 안정화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택배 과로사 더 없도록 특별이 대책 서두르길"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등 코로나 불평등 국민 삶 위협"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위기가 불평등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집중 추진해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줄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 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지원을 마련해줄길 바란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줄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이 심의·의결됐다. /뉴시스

혁신도시 인프라 부족에 '공감대'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이진기관 노조와 간담회 "1기관 1촌 맺기 필요" 의견도... 정주여건개선 지원 약속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는 20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공공 특위는 이날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해 9개 기관 노동조합(지방자치단체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임직원 및 후생복지 담당관을 만나 정주 여건 개선 및 교류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수산대학 김규 노조지부장 등은 이주동성으로 고가의 주택 임차료, 대중교통, 교육기관, 문화시설, 축소약취, 문화공연,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공용 주차장 부족,

도로변 음식물쓰레기통 즐비 등의 인프라 부족 및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신명 노조위원장은 가중되는 후원 등 이전 기관이 17관 1촌 맺기로 지역사회에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주민생활 관련 공통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추후 시, 군, 교육청 등 관계 실무자들의 참석과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전기관에는 더 많은 가족 동반 완전 정착이 된다면 생활민원이 좀 더 빠르게 해결됨으로 혁신도시로의 완전 이전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은 "다른 지역 출장 왕래가 잦은 국가 공공기관들이 모여있으므로 시외·고속·리무진 버스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과 전국 대도시처럼 혁신도시에서 시외·고속버스 공용 터미널

추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인권 의원은 "김제 용지면 육사 밭집으로 악취문제 고통이 있지만 현재 현업육사 매입·폐업을 용역진행 중이다"며 악취 저감 및 현대화를 추진 중으로 3~5년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용 위원장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주민과 도민이 모두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더욱 더 많은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지역민 모두가 이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과 경청을 통해 정주여건의 어려움을 해결해 전라도에서 가장 살기좋은 전북 혁신도시로 홍보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참석한 송지용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전기관 노조 임원진을 격려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최근 5년간 제주도청 공무원 징계 43%가 '음주운전'

민주 한병도 의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 나서야"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의 43%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시)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청 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81명이었으며, 그 중 35명은 음주운전 이유였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제주 공무원은 연도별로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2020년 6명이었다. 이들 35명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은 20명이었고, 면

허 정지 수준은 15명에 달했다. 징계처분별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은 9건, 강등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이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과 2019년에 1건씩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정직1월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도민에 신뢰를 주어야 할 제주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민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를 중심으로 공식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송지용 의장 교통장애인협회와 간담회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20일 의정실에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북도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교통장애인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북도협회 장운선 회장과 강성한 전주지회장 등은 간담회에서 송 의장에게 "전북지역 교통장애인들의 거점 공간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다른 장애인협회처럼 교통장애인협회 전북협회 사무실 마련과 운영 등에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 의장은 "교통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협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